

# 호남권 國道건설 사업 63곳 중 17곳 예산 부족 개통 연기 불가피

## 국토해양부 국감 자료

호남권에 건설 중인 63개 국도건설 사업 중 17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개통을 연기했거나 향후 개통 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익산·대전·원주·부산 등 5개 지방국도관리청이 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에 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국에서 추진 중인 244개 국도건설 사업 중 126개 사업이 짧게는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도로 개통을 연기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했거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부산청에서 추진 중인 77개 사업 중 51개 사업, 서울청에서 추진 중인 24개 사업 중 18개, 대전청에서 추진 중인 48개 사업 중 25개, 원주청에서 추진 중인 32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익산청 산하 호남지역에 추진 중인 63개 국도건설 사업 중 24.1%인 17개 사업이 완공이 연기됐거나 연기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당초 지난 2004년 개통이 예정됐던 완도~군외(확장), 지난해 완공이 예정됐던 도암~강진(확장), 올 완공 예정이었던 장성~아은 국도 건설 사업 등은 내년으로 개통이 연기됐다.

또 지난 2004년 신설 개통키로 했던 구이~이서, 지난 2006년 신설 개통키로 했던 이서~용정 국도 건설사업 등은 올말도 완공이 지연됐다.

이와 함께 신설 공사 중이던 왕곡~금천(2005년 개통 예정), 다시~왕곡(2007년 개통 예정), 월전~세풍(2006년 개통 예정)간

국도 개통은 오는 2010년으로 각각 변경됐다.

학산~주산(올 완공 예정), 돌산~화태(내년 완공 예정)간 국도는 2010년과 1012년으로 개통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참여 정부 출범 첫째인 2003년에 4조원이 넘는 국도건설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에는 3조2천억원대로 감소했다”며 “국가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부를 창출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시 설

### 민주당 지역현안 ‘지원특위’ 제역할해야

민주당이 광주와 전남의 현안사업 관련 5개 특위를 구성,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전남 조전소 지원 특위와 호남고속도로 조기 개통 특위, J프로젝트 지원 특위, 광주 연구개발 특구 지정 지원 특위, 첨단의료융복합단지 지원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지역현안사업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 개통은 물론이거니와 J프로젝트는 정부의 심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나 첨단의료융복합단지 조성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전남 조전산업도 위기가. 서남권에 중·대형 조선소가 잇달아 건립되면서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업체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 지원 등 대책이 없으면 지역경제는 활력을 찾을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민주당이 특위를 구성, 각종 지역현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다행이다. 비록 야당이지만 당 차원에서 정부에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광주·전남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것도 고무적이다.

문제는 청와대나 정부 요직에 광주·전남의 인맥이 없다는 점이다. 중앙에 지역현안을 챙겨줄 사람이 없다 보니 ‘출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전남 대형사업의 예산이 누락되거나 대폭 삭감된 것은 지방과 중앙을 이어주는 끈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광주·전남 ‘출대’를 시정해야 한다.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에서 드러나듯 지역사회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각하다. 지역현안사업 지원 특위의 활동이 주목된다.

### ‘성공’ 가능성 확인한 광주비엔날레 한 달

광주비엔날레가 5일로 개막 한 달을 맞았다. 비엔날레는 대회 운영과 작품의 질, 시민참여 등 모든 면에서 무난하게 치러지고 있다. 준비과정에서 신중하게 파동 등 어려움을 겪은 점을 감안하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관객액은 하루 평균 4~5천명 수준의 12만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대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단체관람과 무료관람을 줄인 대신 유료관람을 늘려 실적을 챙겼다. 수준 높은 전시, 시민과의 소통 원활, 정체성 확보 등 긍정적 평가도 뒤따랐다. 광주비엔날레 13년 역사상 듣기 힘든 호평이다.

무엇보다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 비엔날레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세계 미술전문가들은 “광주비엔날레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세계 비엔날레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도전과 실험’이라는 비엔날레의 기본정신에 충실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외국인 감독과 주제 없는 전시 등은 이번 비엔날레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제레시장과 미술관 등 도시 전체를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세계 미술의 흐름에 맞는 질 높고 다양한 작품을 압축 전시해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 ‘도전과 실험’을 통해 난해한 현대미술도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작품 훼손과 무질서 등 부끄러운 관람 문화와 관람객 편의를 무시한 일부 전시 기획, 외국인 관람객 저조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남은 기간 완벽한 운영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비엔날레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원한다.

### 다시 도마위 오른 증권가 ‘정보지’

#### 최진실씨 자살 ‘사채업 괴담’ 진원지로 밝혀져

텔런트 최진실씨를 자살에 이르게 한 ‘사채업 괴담’의 진원지는 여의도 증권가였다. 최씨가 숨진 안재환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받지 못하자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가해 결국 안씨를 자살로 내몰았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는 증권가 정보지(일명 짜리사)를 통해 유포됐으며, 이 루머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증권사 여직원 A씨가 입건됐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를 조사한 결과, 사채업 괴담의 출처가 증권사 정보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2005년 ‘연예인 X파일’ 사건을 계기로 당국의 집중단속을 받았던 증권가 정보지가 여전히 악성 루머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파급력도 폭발적으로 커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번에도 경찰에 입건된 A씨가 증권사 정보지에 나와 있던 최씨의 루머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과거와 달리 누구나 그럴듯하게 정보지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게 됐으며 그에 따라 폐해는 더욱 커지게 된 것.

자살에 이른 최진실씨 외에도 금호, 두산 그룹 등은 유동성 위기의 기업으로 지목돼 주가가 급락하는 등 고통을 겪었고, 가수 나훈아씨는 괴소문에 휩싸여 기자회견을 자청해야 했으며 모 유명인사는 강한 부인에도 지속적으로 이혼설에 시달렸다.

올해도 ‘9월 위기설’과 함께 악성 루머에 중시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은 개인의 메신저까지 모두 검사하겠다고 했지만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출금

### 김민석 방북 좌절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2일 민주당의 대규모 개성공단 방문에 동행하려다가 출국금지조치로 인해 남측 CIQ(출입관리소)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남측 CIQ에서 출국 수속을 밟다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로부터 출국금지조치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방북을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김 최고위원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8일부터 한달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 팬클럽

### ‘명사랑’ 회장 체포영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 ‘명사랑’의 정모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4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인 또 다른 정모씨를 통해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G사로부터 사건 무마 부탁과 함께 4억원을 갹진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 정씨는 이 업체로부터 20여만원을 받아 4억원만 정 회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6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 김영철 총리실 차장 사표 수리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무총리실 김영철 사무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사무차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공식 수리됐다”고 말했다.

김 사무차장은 지난 2002~2005년 중부발전 사장 재직 시절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케너텍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단기 4341년 국조단군대제

개천절인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5·18공원 내 여의산 정상 단성전에서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초헌관) 등 제관들이 단기 4341년 국조단군대제를 거행하고 있다.

/고정석기자 ksgo@kwangju.co.kr

#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추진 제안

## 李 대통령 “외환 보유고·외채규모 실상 투명 공개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미국발(發) 금융위기와 관련, “역내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시아가 세계의 성장 엔진인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의 실물경기 침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러시아 방문기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합의한 한러 금융장관회의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시장의 불확실한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외환보유고와 외채규모 등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특히 외화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기관들도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관련 기관들은 치밀하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되, 방심하지 말고 최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둔 단계별 비상대응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상황이 IMF(외환위기) 때와 현저히 다르다”면서 “97년 12월말 외환보유액은 204억달러, 가용 외환보유액은 89억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9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천397억달러이며 대부분을 주요선진국 발행 국제 채권에 운용하는 등 거의 100%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또 “올 4.4분기에는 경상수지의 흑자전환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회의 참석자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예정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에서 돌아온 당일인 1일 거시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데 이어 휴일인 오늘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금융위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정경길 대통령실장, 사공일 대통령 경제특보, 박병문 경제수석, 박재현 국정기획수석, 이동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태권도도 자살

이러고도 사는 우리 어쩌라고..

**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추진**

**野 “반 촛불법안 추진” 반대**

한나라당은 3일 텔런트 최진실씨의 자살로 인터넷 ‘악플’(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극명히 드러난 만큼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을 개정하는 등 이른바 ‘최진실법’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민주당이 ‘표현 자유의 억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정기국회에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온 것 관련, “이 문제를 계속 반대한다면 최진실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최씨 자살을 빌미로 ‘반(反)촛불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사이버 모욕죄 등을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이 국회 통과를 시도할 경우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부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광주비엔날레 한달’ 1면서 계속**

또한 비엔날레 전시장인 의재미술관의 경우 일부 불지각한 관람객들의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뜸한 점을 이용, 영상작품이 설치된 암실에서 낮잠을 자거나 과도한 애정 표현을 하는 관람객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일부 택시기사의 바가지 요금도 문화수도 광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주범으로 지적됐다. 광주비엔날레 해외 홍보 에이전트인 마크 윌러(독일)는 지난날 5일 광주공원에서 중의 공연 비엔날레 전시관까지 택시 요금으로 10만원을 지불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업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독자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                         |                    |                      |                       |
|-------------------------|--------------------|----------------------|-----------------------|
| 편집국내대 (대표 FAX 222-4918) | 사 회 2 부 2200-619   | 경 영 지 원 국 2200-511   | 문 화 회 보 국 2200-541    |
| 편 집 부 2200-629          | 문 화 생 활 부 2200-626 | 〈 F A X 222-8005 〉   | 〈 F A X 222-0195 〉    |
| 정 처 부 2200-616          | 여 령 배 부 부 2200-628 | 광 구 미 케 영 국 2200-521 |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
| 경 처 부 2200-617          | 체 육 팀 부 2200-627   | 〈 F A X 227-9500 〉   | 〈 F A X 227-9500 〉    |
| 사 회 1 부 2200-618        | 사 진 부 2200-690     | 디 자 인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
| 〈 F A X 222-4267 〉      | 조 사 부 2200-570     |                      | 〈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